

농촌정보문화센터 7월 1일 문 열어

농업·농촌 가치 널리 알리고 농·도 상생의 길 모색



농촌정보문화센터는 7월 6일 양재동 외교센터에서 헌판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했다.

‘농촌정보문화센터’가 농업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널리 알리고 농·도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1일 연구원 부설로 설립되었다.

정보문화팀 등 4개팀 운영

앞으로 농촌정보문화센터는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농·도간 상생여건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농업인의 농업정책 수용역량 강화 및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교육연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제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기획평가팀, 정보문화팀, 홍보개발팀, 관리운영팀 등 총 4개 팀을 구성·운영한다. 현재 소장을 비롯 6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초대 소장은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지낸 진재학 씨를 임명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에는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사무실 개소식과 헌판식을

가졌다. 이날 센터 헌판식에는 허길행 원장대행과 최송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농림부 차관, 농업인단체 등 농업관련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출범을 축하했다.

농·도 상생의 길 찾는데 주력

이날 개소식에서 진재학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정보문화센터는 농촌과 도시는 형제라는 생각으로 농·도간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 찾기에 온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일에 제 몫을 다하길 당부했다.

사명감 갖고 최선 다하길

이명수 차관도 축사를 통해 “농촌정보문화센터는 시장개방 확대 등 우리농업

의 어려운 현실에서 농업과 국민경제의 공존, 농·도가 균형발전의 필요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설된 기관인 만큼 임직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공채된 농촌정보문화센터 직원은 다음과 같다. △소장 진재학, △선임관리원 이능완, △전문연구원 연구영, 김상호, △연구원 정한모, 최영운, △2급관리원 허상성.

연수, 업무 벤치마킹·개선

우리 연구원은 연구지원부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꾀하고자 2003년부터 국내외 직무연수를 실시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엔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연구기관을 돌아보며 각종 업무를 벤치마킹하고, 미국의 농무성 경제연구소, 미주리대학 부설 식량 및 농업정책연구소 등을 방문·조사하고, 농촌현장을 돌아보며 업무개선 방향을 모색해 접목하였다.

2004년에도 국내 유사연구기관과 호주의 농업지원경제국, 덴마크의 식품경제연구소, 독일의 연방농업연구소, 일본의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등을 시찰하고 각 분야의 업무개선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또한 선진 농업국의 농촌현장과 농산물 유통현장을 시찰하며 선진농업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 연구원은 그 동안 실시한 연구지원부서 연수가 업무추진에 유익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향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수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가져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7월 5일 개최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 연구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본법, 농정시책 근간 되도록 제정

이날 토론회는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맞게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본법의 개정방향을 설정하고자 개최해 2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정영일 서울대 교수 사회로 열려 우리 연구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농촌기본법은 국가의 농정방향을 재정립하고 모든 농정시책의 지표와 근간이 되도록 제정 수준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농업인·농촌 개념 재정립 필요

또한 김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 일본, 미국의 기본법에 대해 설명하며, 기본법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농업, 농업인, 농촌 등의 개념 재정립과 국가와 지자체 등 농정주체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해야 하고, DDA 농업협상, FTA 등에 대응하여 농업통상 및 국제협력의 기본방향과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농업·농업인·농촌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농업인 단체에서는 향후 기본법에 농업과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식량자급목표를 법 개정시 반영하지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단체 참석자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농업기본법'으로 개칭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의견 충분히 수렴해 개정 추진

학계에서는 농정의 범위를 농업·농업인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공급, 환경보전과 농촌지역 진흥 등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참석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

할 부담은 실효성이 적고 책임한계에 따른 갈등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언론계에서는 홍보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관광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장태평 농업구조정책국장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하에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설계 및 결과세미나

우리 연구원은 7월에 설계세미나 4건, 보고세미나 6건 등 총 10건의 세미나를 가졌으며 연구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설계세미나)

- △가축공제 확대방안
- △농업환경지원 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1/3)
-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방안 연구

(결과세미나)

- △친환경살의 재배유형별 생산유통소비 구조 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
- △녹차 수출시장 진출전략 및 수출상품 개발(2/2)
-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
- △농가부채문제 전망과 농가파산 및 회생프로그램 개발(2/2)
- △청원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 △산림농업의 정책화 방안(3/3)

벤처농기업보육센터 하계 워크숍 가져

우리 연구원 부설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는 지난 7월 8일과 9일 인변도 유명산장에서 2005년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및 운영위원·전담컨설턴트 하계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연구원 입주업체 대표 및 컨설턴트, 운영위원과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와 각종 경영교육, 벤처농기업을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첫날은 CEO 경영전략 투자유

치를 위한 재무계획이란 제목으로 벤처기업 서울지역 매니저협의회 이선호 회장이, '창업과 기업가의 정신'이란 제목으로 세위 경영컨설팅 이익수 대표가, 기업참여와 벤처농업이란 제목으로 우리 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이 발표한 뒤, 졸업기업인 인갑균연구소 정재환 대표가 사례 발표를 하였다. 이튿날은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의 현황 및 활성화방안'이란 제목으로 우리 연구원 조명기 연구위원이 강의한 뒤 단합체육대회와 벤처농기업 현장방문을 하였다.

양정제도 개편방향과 공공비축 세부 운영 방안 토론



양정제도 개편 및 쌀 공공비축제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7월 19일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7월 19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양정제도 개편 및 쌀 공공비축제 도입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개최식에서 허길행 원장대행은 “최근 양정여건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발표되었다”고 말씀을 열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공공비축제 도입 등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통해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당부했다.

공공비축 물량 560만석 적합 제안

이어 서울대 정영일 교수 사회로 토론회가 열려 농림부 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이 ‘쌀산업 정책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국장은 발표를 통해 ‘쌀협상·DDA 협상에 다른 개방폭의 확대와 WTO 보조금의 감축이라는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정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소득보전방안을 통한 직접지불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 목적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며, 수급조절은 민간수급조절기능 활성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양정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이와 관련된 향후 양정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별로 나눠 설명했다.

우리 연구원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쌀 공공비축제 도입 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공공비축 물량은 560만석 내외가 적합하며 소비량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비축미는 국내산으로 비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준 물량의 1/2 수준을 방출하는 회전비축이 좋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은 경쟁입찰이 바람직하나 도입초기에는 수의계약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이해 바탕으로 양정 추진해야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많은 토론자들이 공공비축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농업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양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농민단체 토론자들은 농업인의 이해와 복합을 고려한 양정이 수립되어야 하며 비축

미 구입량은 500만석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쌀전업농중앙회는 도별 가격을 적용한 수의계약과 쌀자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토론자들은 정책변화에 따른 장기 시장분석이 선행된 상태에서 양정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공비축제 실행에 있어서 입찰을 통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매입방식과 가격 적용 이견 맞서

언론계 토론자들은 정책 이행 주체인 농업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비축미는 시장안정 측면에서 수의계약 되어야 하고, 산지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PC 관계자는 수확기 흡수 물량용 정부가 늘리든지, RPC가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는 박민웅 전농 사무총장, 사공용 서강대 교수, 손재범 한농연 정책실장, 신기엽 농협 조사부장, 오덕화 농민신문 편집국장, 이익재 김제새만금 RPC 사장, 이태호 서울대 교수, 조용래 국민일보 논설위원, 한두봉 고려대 교수, 홍준근 한국쌀전업농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양정제도 개편방향 토론회는 7월 19일 서울에 이어 21일 경기도 농업기술원, 22일 충북 공무원교육원, 27일 전북 도청회의실 개최했고, 8월 3일은 밀양대학교 영남농정포럼에서 토론회를 연다.

신선편이 농식품 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 기술개발 발표회 및 상품전시회 가져

우리 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는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와 공동으로 7월 7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2005 신선편이 농식품 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 및 기술개발 발표회와 상품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연구개발된 농식품 관련 기술의 농가 및 산업체로의 기술확산을 통한 신선편이 기술의 확산과 산업화를 촉진하고, 신선편이 식품의 선도유지, 위생적 안전성 확보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준영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이 ‘농산물 유통 정책방향

이란 제목으로, 이어 한국식품연구원 김동만 박사가 ‘신선편이 식품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 뒤 신선편이 식품의 선도유지, 위생적 안전성 확보 및 산업 활성화 방안도출을 위한 토론을 하였다. 이어 신선편이 농식품 산업 관련 기술의 농가 및 산업체로의 기술확산을 위한 기술발표회도 있었다.

또한 20여개 업체 및 기관에서 신선도 유지제품, 선도유지제, 포장기, 신선편이 농산물 및 식품, 식품위생검사기, 각종 측정기, 신선편이 셀러드, 세척농산물 등 60여개 제품도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

김 정 호 선임연구위원

「농업·농촌기본법」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 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그동안 세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 동안 대외적으로 쌀 관세화유예 협상,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진행되면서 농업·농촌의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후 10년 계획의 「농업·농촌종합대책」(04.2.25)이 수립되는 등 중장기 농정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정제도의 모범으로 재정립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은 구 농업기본법(1967년 제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년 제정)을 통합하면서 일부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제정되어 법률의 체계나 성격이 조잡한 실정이다. 따라서 먼저 기본법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농업관련 법률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정의 원칙과 방향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추상적인 이념 제시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법에 근거하여 하위법이 제정되고, 아울러 농정분야의 제반 법률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선언적 규정과 집행적 규정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정의 이념과 방향 등은 선언적 규정일 수밖에 없으나,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집행적 규정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하위 법률의 무질서한 개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셋째, 법률이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은 경제입법으로서 각종 시책이 탄력성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법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장기 목표만이 아니라 중기적인 시책을 규정하여 필요시 상황 변화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농가 정의 등은 수정할 필요

기본법 제정 당시에 소홀히 다루었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 관련산업(농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 농업관련 서비스, 농촌관광)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농업인과 그 가족경제체인 '농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농업경영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부여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는 식량안보와 다원적기능 유지, 농가소득안정, 식품 안전성 확보, 시장지향적 제도정비 등에 주력하고, 지자체는 지역농업 진흥, 농촌지역 개발, 주민복지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다. 또한 농정 추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농산물의 공급조절, 시장개척, 수요개발 등의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은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개정 요구이기도 하다. 현행 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식량자급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량자급률은 국가적 목표로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을 포함한 자금계획의 수립, 자금률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 체계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건 변화에 따른 남북농업교류도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통일대비 조사연구, 농산물의 민족내부거래 등을 규정하는 정도이지만, 앞으로 북한과의 농업협력을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등 정책 방

향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농정이 농업정책에서 식료정책과 농촌정책으로 중심 이동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장개방 진전에 대응하여 수입농산물 관리와 소비자 보호 및 농식품 소비에 관한 시책,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등이 실효성 있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식료·농촌정책은 강화되어야

농촌의 신가치 창출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고양하고 농촌지역사회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촌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태환경 경관 등 농촌의 가치 재발견, 귀농이나 도시민 이주 등 인구 유입 대책, 농촌지역의 혼주화에 대응한 공간 정비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농업의 다양성과 지방농정의 창의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농업인력의 여성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 고령화 진전에 따른 농촌형 사회복지 체계의 구축 등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모범적 성격의 규정이 필요하다.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각계에서 논란이 많다.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고 하듯이, 왜 법 개정이 필요하며 누구 의견으로 개정하느냐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본법이 특정 이해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농정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기본법의 큰 틀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DDA 농업분야 7월 협상 동향

임 소 영 연구원

WTO 회원국들은 지난 해 7월 말 기본 골격에 합의하면서 세부위치 즉 모델리티 협상을 2005년 말 홍콩 각료회의 시까지 끝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모델리티 협상은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WTO 농업위 특별회의 그로서 의장은 최종 합의안 도출 시한이 반년 가량 남은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남은 협상의 기초가 될 만한 초안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핵심 쟁점들에 대한 협상 그룹간 시각차가 여전히 커 이번 모델리티 초안이 협상에 있어 의미 있는 문서가 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2, 13일 양일간 중국에서 열린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결과가 있었으나 모델리티 초안의 채택 여부는 남은 기간동안 주요국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타협을 이루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성과 없이 끝난 특별회의

모델리티 초안 도출 시점까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는 당초 대련에서 개최될 소규모 각료회의를 앞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실무 차원의 협상 결과는 이어 중국 대련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의 논의 수준과 연결되고, 각료회의의 결과에 따라 모델리티 초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특별회의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주간 초반에 열린 주요 5개국(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회의에는 주요 협상국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성과 없이 끝났고, 농업위 특별회의에서도 각국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

전상태에서 끝났다.

이처럼 실무 차원의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대련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도 큰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또한 모델리티 초안 도출을 앞두고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모델리티 초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기기는 어려울 것이며, 모델리티 초안이 2005년 하반기 논의의 발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모델리티 최종 합의안 도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뜻밖의 분위기 반전

그러나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련 각료회의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개도 수출국 그룹인 G20이 시장접근분야 제안서를 배포하여 논의가 급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제안서에서 G20은 미국과 EU가 각각 주장해 오던 바를 적절히 반영하여 절충점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미국과 EU가 논의의 기초로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던 핵심 쟁점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G20의 제안서가 배포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자 G10은 뜻밖의 결과에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EU와 G10은 시장접근분야의 핵심 쟁점인 관세감축공식이나 민감품목에 있어서 뜻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EU의 입장 변화는 G10 국가들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G20의 제안서는 관세 구간별 일률적 감축(선형감축방식) 외에 관세 상한을 설정하는 등 G10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G10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선형감축방식과 관세 상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G20의 제안서를

따르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중 고율 관세를 가지고 있는 품목들은 대폭적인 관세 감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델리티 초안 도출까지

그러나 G10의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G20의 제안서는 모델리티 초안의 기초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들간의 각료회의를 끝내면서 의장은 요약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모델리티 초안 도출까지의 협상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이번 G20 제안서를 논의의 기초로 수용했을 뿐 여기에는 추가적인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으며, 수입국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이를 무미할 요소들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속한 G10의 입장에서는 선형감축방식에서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데 주력하고 관세 상한 설정을 막아야 할 것이다.

7월 21일부터 각 협상 그룹들은 G20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실무차원의 협상을 가지고 27일부터는 주요국의 각료들이 참석하는 그린룸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남은 기간 동안의 협상 결과에 따라 모델리티 초안의 내용이 결정되는 만큼 각 협상 그룹들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모델리티 초안 도출 시점인 일반이사회가 십여 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짧은 시간동안 각 국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어떤 수준에서 타협하는가에 따라 의미 있는 모델리티 초안 도출 여부가 결정되고 나아가 DDA 농업분야 모델리티 협상 성공 여부가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민 식생활정착 위한 식육(食育) 추진

일본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회복을 목적으로 '식육(食育)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리를 회장으로 하는 '식육추진회의'를 설치하여 '식육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 소비자, 기업, 학교 등이 참여하는 식육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식육이란 식품 안전에 관한 지식, 식품의 선택과 조합방법, 기타 식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대상은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이다.

식육 추진의 목적은 식생활에 관한 지식을 국민에게 확산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하고, 동시에 소비자에게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 향후 학교를 비롯하여, 지역, 기업 등이 연계하여 식생활 정보제공, 농업체험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초 식육기본법을 제정,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육추진의 책무 강조

식육기본법에는 '어린이들이 풍요로운 인간성을 함양하고 살아가는 능력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생활이 중요하다고 명기하고, 가정이나 학교, 보육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식육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식육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교육관계자, 농림어업자, 식품사업자, 국민 등 각각에 대해 식육 추진의 책무를 요구하고, 정부도 필요한 조치의 제도화와 예산확보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농림성과 후생성은 금년 8월부터 하루에 무엇을 얼마만큼 먹으면 바람직한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식생활균형가이드'를 작성, 외식업체나 슈퍼 등에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2000년 3월 당시 문부성, 후생성, 농림성 등 3성이 수립한 '식생활지침'이 인지도가 낮았던 점에 대한 반성에서 농림성과 후생성이 공동으로 균형적인 식생활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으로서 '식사균형가이드'를 최근 발표하였다.

각지에서 다양한 식육운동 전개

이 가이드는 기존의 식생활지침을 알기 쉽게 도식화한 것이다. 1일 균형 섭취량을 주식, 부채, 주채, 우유·유제품, 과일 등 다섯 가지로 구분,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팽이 모양의 모형에 주식은 벼이삭 이미지의 황색, 부채는 녹색, 육류 등 주채는 적색, 우유·유제품은 자색, 과일은 청색으로 표시하였다. 또 과자, 음료 등은 팽이 줄, 물과 차는 팽이 축으로 표현하였다.

식육운동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쿄(東京)에 소재하는 햄버그 회사인 모스푸드서비스는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출장수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모스버그의 지점장이 강사가 되어 아침식사의 중요성과 일본 식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또 점포에서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를 건조시켜 계약농가에게 퇴비로 환원하는 대응책을 소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식생활 후란의 요인으로 패스트푸드를 들고 있으며, 식육을 통해 이와 같은 나쁜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의욕이다.

센다이시(仙台市)에 있는 니시야마 초등학교는 2년생이 학교 실습지에서 체험학습으로 수확한 감자를 전교생에게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학교 영양교사는 학생들에게 '농지와 식탁의 연계성'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지도하는 것은 비상근 교사인 농가들이다. 학교농원의 지도에서부터 지역산 농산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고, 때로는 교단에서 농업과 식생활의 즐거움을 들려준다. 이 학교는 식육법 시행을 계기로 내년도부터 식육을 더욱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이현의 고하마시(小浜市)에서는 '어린이주방'을 개최하고 있다. 쌀을 씻고, 차를 끓이며, 식칼을 사용하는 식체험을 통해 식생활에 대한 흥미 유발이나 미각 계발에 관심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식육추진으로 지역활성화 기대

식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선 총리실에 '식육추진실'을 발족하여 관계 부처의 업무조정을 도모하면서, 총리를 회장으로 하고, 농림장관, 후생장관 등 관련 13개 부처 장관과 농업, 교육, 영양 분야 전문가 12인이 참가하는 '식육추진회의'를 설치한다. 이 회의에 검토회를 별도로 두어 내년 6월까지 '식육추진기본계획'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7년도 예산을 확보, 본격적으로 식육활동을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본계획은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의 자금률 목표와 같이 수치목표를 제시하여 식육운동에 탄력을 붙인다는 의도이다. 기본계획을 근거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식육추진계획을 작성, 계획적인 운동을 추진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성은 이러한 조류를 배경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 구축,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은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산지소'전개, 안전성면에서 우월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 향상에서 지역 진흥에 이르기까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태곤 연구위원>

농어촌 체험마을 246곳 조성, 농림부 조직혁신 본격화

‘살고싶은 농어촌 환경 조성’...제2기 농특위 출범서 보고

농특위는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기 농어업특위 출범’ 대통령 보고회에서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서 연면적 33㎡ 이하 소규모의 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 조성비를 감면하고,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폐교와 국유림 활용 때 우선권 부여 및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또 올해 말까지 △농어촌 체험마을 246개소 △체재형 주말농원 2개소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26개소 △농어촌노인복지단지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농어촌 체험관광이나 농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농교류·정주지원 기구 설립을 검토 중이다.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 비수확기로 변경 추진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쌀 소득보전기금의 목표가격 기준을 현행 수확기에서 비수확기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7월 11일 국회와 농림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최근 쌀 소득보전을 위한 목표가격 기준을 쌀의 평균 단경기 가격변동 등을 감안해 농림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는 내용의 쌀소득 보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 4월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부터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산 등의 검토에 들어 가면 논란이 예상된다는데 언론의 시각이다.

농촌지역 2년간 100가구 중 3가구만 출산 경험

최근 2년간 농촌지역 100가구 중 출산을 경험한 가구는 단 3가구뿐인 것으로 조사됐고, 농촌화생의 40% 이상은 방과 후 별도의 사교육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가 7월 12일 발표한 지난해 11월 전국 88개 시·군 1,870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지역 가구 중 3.2%만이 최근 2년간 출산을 경험했다고 답해 농촌지역의 심각한 출산기근과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출산경험률은 2001년 조사결과(10.3%)에 비해 7%p 가량 감소한 것이다.

전국 20개 농업클러스터 3년간 총 1천 200억원 지원

농림부는 7월 13일 ‘지역농업 클러스터 종합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지역클러스터가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외에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통시설 등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올해 하동 녹차클러스터를 비롯한 전국 20개 ‘지역농업 클러스터’에 3년간 총 1천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우선 올해 총 24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이다.

쌀 자조금제 도입시 ‘쌀소비 촉진법’ 추진

농림부는 7월 19일 aT센터에서 열린 양정제도개편에 관한 토론회에서 “쌀 생산 농가와 농민단체들이 쌀소비 홍보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쌀 자조금 제도 도입에 합의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쌀 소비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쌀 소비촉진법이 제정되면 농업인들이 쌀 자조금 조성을 위해 각출하는 기금만큼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농민들은 조성된 자조금을 이용, 자율적으로 쌀소비 촉진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홍보활동 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 수입, 쇠고기의 1.5배...상반기 13만 8,000톤

7월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13만 8,000t(3억 1,000만달러)으로 작년 같은 기간 8만 9,000t에 비해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이 쇠고기 수입량 1.5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관세청은 “국내 양돈사육수는 2003년 9월 928만 7,000마리에서 지난 3월에는 883만 8,000마리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여서 돼지고기 수입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200여개 계조직 폐지하고 부분팀제 도입

농림부는 7월 8일 조직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7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직혁신안은 기존의 계 조직 200여개를 폐지하고 부분적으로 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로, 농림부는 계 조직의 폐지를 통해 의사결정 단계의 축소, 농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신속적 대응 및 직위의 능력개발·학습능력 향상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동원 부연구위원>

FANEA, 중국 농산물 무역관련 세미나 개최



FANEA는 7월 7일 다산홀에서 '중국 농산물의 국제교역 및 경쟁력'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가졌다.

우리 연구원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은 '중국 농산물의 국제교역 및 경쟁력'이란 주제로 7월 7일 다산홀에서 제2회 FANEA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Weng Ming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을 소개한 뒤 중국농산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밝혔다.

Weng Ming 박사는 "최근 2년 동안 농산물 수출 증가율이 수입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품질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물량만을 강조하는 중국 농업정책에 기인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Weng Ming 박사는 "중국은 밀, 옥수수, 대두가 이미 비교우위를 상실했고, 쌀과 밀, 옥수수의 생산능력은 국내 기초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며, 과일은 사과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축산물은 가격우위는 있으나 품질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이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토론을 하였다.

농정속보와 영문보고서 2권 발간

우리 연구원은 최근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이란 제목으로 농정연구속보와 'Comparison of production costs and world market adjustments to changes in trade policy for japonica rice', 'Quarterly livestock model'란 제목의 2권의 영문 보고서를 발간했다.

□ 연구진 대외활동

△서종혁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은 7월 13일 대만에서 열린 한-대만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쌀기반 소농구조하의 지속가능한 농업기술개발'이란 제목으로, 송주호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역 축산 총량제 도입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최정섭 선임연구위원은 7월 5일 순천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석현덕 연구위원과 민경택 전문연구원은 7월 7일 산림과학원에서 '식물신품종보호제도와 임산버섯 종균관리'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국제식물신품종제도가 우리나라 버섯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박시현 연구위원은 7월 7일 행사부 자치인력개발원 초청 지역경제진흥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정민국 연구위원은 7월 19일 안성교육원에서 축산컨설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우사육 동향 및 전망'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송미령 연구위원은 7월 26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강당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농교류의 비전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7월 28일 경상대학교에서 농산물마케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공동계산 효과와 추진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신용광 전문연구원은 7월 18일 일본 아사히카와대학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환경을 고려한 농업생산성 계측'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강혜정 전문연구원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서부농업경제학회에 참석하여 '한국 농업의 생산성 변화'란 논문을 발표했다.

□ 연구원 내방객

△양더홍 베이징시 농촌공작위원회 주임을 단장으로 한 베이징 농업대표단 7명이 6월 30일 연구원을 방문해 정기화 연구위원으로부터 새마을 운동에 대한 강의를 듣고 상호관심사를 나눴다.

△호주축산공사 축산관측팀이 7월 18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 농업관측정보센터 축산관측팀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KREI Tour ④ 주요 토론의 장(場) 다산(茶山)홀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따 신가치 선포식 때 다산홀로 명명한 대회의실.

다산홀은 우리 연구원의 주요 행사는 물론 농업관련학회와 주요 농정의 토론회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다산홀은 내부를 현대식으로 꾸미고 음향도 회의용으로 새롭게 시 설하여 활용도가 날로 제고되고 있으며 규모는 최대 1백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또 한 메토링홀과 연결하여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대형스크린과 음향시설도 되어 있다.

